

라면 대표업체 ‘팔도’, 폐기물 불법 처리 논란

유통기한 지나고 반쯤된 라면 400여 t
강진 무자격 폐기물 처리업체에 넘겨
무허가업체 알고도 위탁 계약 의혹
비닐포장재 멋대로 소각 불법매립
폐기물업체 대표는 부도 내고 잠적

사항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업체는 폐기물 소각 허가를 받지 않아 라면스프와 포장지 등을 처리할 수 없으나, 실제로는 공장에서 불법 소각해 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상으로는 ‘포장지 등은 별도 소각업체를 통해 처리하겠다’고 조건을 내걸었으나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팔도는 A업체에게 폐기물 처리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폐기물 위탁 처리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이 나온다.

팔도는 위탁계약에 앞서 A업체로부터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하는데, 2017년 당시 확인서 서식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적힌 영업대상 폐기물 등을 모두 적으라’는 란이 있다. 팔도 측에서도 A업체가 라면 부산물 처리를 허가받지 못했다는 점을 사전에 확인 가능했던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이전에 A업체에서 근무했던 전 근무자의 제보를 통해 드러났다. A업체가 팔도 라면을 주기적으로 대형화물차로 들여와 라면은 떡밥으로 사용하고, 라면스프와 비닐용기 등은 멋대로 소각해서 매립한 것을 목격했다는 주장이다.

전 근무자는 앞서 지난해 A업체를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강진경찰에 고발했으나, 경찰은 한 차례 불법 매립 의심 지점을 파본 뒤 폐기물이 나오지 않아 ‘혐의 없음’ 처리했다. 고발한 전 근무자는 이와 관련 무고죄로 고소당해 검찰 송치까지 됐다.

다만 지난달 추가 신고를 받고 강진군과 경찰이 인근 불법 매립 지점을 파 본 결과 불법 매립 폐기물이 발견되자 경찰이 재수사에 들어간 상태다.

팔도 측은 “3년마다 관련 자료를 폐기하고 있어 2017년께 자료는 확인할 수 없어 불법계약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최소 2020년 이후부터는 A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를 통해 폐기물 처리를 해 온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B씨는 지난 6월 A업체를 최종 부도내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A업체는 법원경매에 넘어가 현재는 B씨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강진·남철희 기자 chouh@kwangju.co.kr



지난달 19일 강진의 농업법인 A업체 공터에서 발견된 불법 매립 폐기물(쭈팔도의 라면 폐기물 포장재 등이 뒤섞여 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h@

고관절 인공물 제거 뒤 신경 손상 법원 “조선대병원 손해배상 책임”

법원이 고관절 인공삽입물 제거 수술 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의 신경을 손상시킨 대학병원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노재호)는 A씨가 조선대학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과 함께 A씨에게 636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고 23일 밝혔다.

소방공무원인 A씨는 지난 2017년 4월 산에서 내려오다 넘어져 우측 고관절 골절-탈골 증상으로 조선대병원에서 수술(고관절 부위에 인공 삽입물을 이용한 고정술)을 받고 퇴원했다.

A씨는 간헐적 하지 통증을 호소하며 1년여 동안 내원했고 결국 이듬해인 2018년 7월 인공 삽입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제거 수술 뒤에도 족하수(발 앞쪽 부위가 처져 걸음걸이에 이상이 발생하는 증상)가 지속되자 검사를 받은 결과 ‘좌골 신경손상’이 확인됐다. 무릎-발 관절이 완전히 굽혀지지 않고, 마비가 지속되며 무릎 부위 아래 발등 발바닥 부위의 감각 저하 휴유증도 발생했다.

이에 A씨는 “조선대병원 의료진이 ‘고정술 진행 시 유착방지제 미사용’ 등 적절한 처치와 진료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신경 손상 등을 일으켰다”며 3억 43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1차 수술 부위에 유착이 발생한 만큼 유착 정도, 골절면의 위치·유합 정도, 향후 추가로 시행될 수 있는 수술의 선택지 등을 고려해 환부의 도달 방법·인공 삽입물 제거 방식에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했어야 한다”면서 제거수술 당시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하지만 조선대병원이 수술용 금속판 제거 시 유착으로 인해 증상이 악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고 A씨와 가족 의사에 따라 제거 수술을 한 점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 책임 비율을 20%로 제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학교 비정규직 25일 총파업...급식·방과후돌봄 차질

광주·전남교육청 대체급식·단축수업 등 대책 마련 나서

광주시·전남도 교육청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에 대비해 대체 급식과 단축수업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고 있지만, 지난해의 경우 파업 참가인원은 487명으로 11.2%의 참여율을 보였다. 광주에서는 지난해 파업으로 40여개 학교에서 급식차질을 빚기도 했다.

시교육청은 파업에 따라 가장 큰 차질이 예상되는 학교급식은 빵·우유·도시락으로 대체하고, 상황에 따라 단축수업 등 학사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학교에 안내했다.

또 방과 후 초등돌봄교실과 유아돌봄 종사자 50%가 파업에 참여할 경우 통합 운영하고, 전체 공백이 예상될 경우 총파업 당일은 운영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전남도교육청의 경우 1000여개 학교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 8900여명 가운데 지난해 파업에 참여한 인원은 1650여명으로 18.46%의 파업 참여율을 나타냈다.

도교육청은 파업을 대비해 직종별 파업 참여율에 따라 정상급식, 식단 간소화, 간편식 제공, 학생 도시락 지참 등 대책을 마련해 대처하도록 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학교급식식 폐암 등 심각한 중대재해 종합대책 마련, 정규직 대비 60~70% 수준인 임금의 합리적인 개편, 각종 수당의 10년차 기준 정규직 대비 약 1000만원 격차 등 복리후생수당 차별 철폐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 9월부터 8차례에 걸친 본교섭과 실무교섭에 이어 10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를 거쳤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지난 10일 찬성률 86.3%로 파업을 결의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보다 파업규모가 큰 것에 대비해 학생·학부모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귀산촌 정착 지원금 6억 ‘꿀꺽’...2명 징역형

창업자금 아닌 개인용도 사용

담양에 귀촌해 표고버섯 농사를 짓겠다며 정부 지원금인 귀산촌 창업·정착 자금 6억을 받아 행진 40대 2명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혜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공모한 B(43)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 2018년 5월께 담양군 산립조합에 표고버섯 재배 사업 창업 목적 등으로 사용할 것처럼 거짓 기재한 사업신청서·계획서를 제출해 두달 뒤인 7월께 대출금 명목으로 3억원씩 총 6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표고버섯 재배 비닐하우스, 창고, 저장고 등의 시설자금 명목으로 ‘귀산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계획서’와 표고버섯 종균 원목 구입

자금 명목으로 ‘산립사업종합자금 대출신청서’ 등을 각자 명의로 산립조합에 제출해 대출을 받았다.

이들은 대출금 6억원 전부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표고버섯재배사업 창업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대출금을 ‘사업시행지침서’ 등에서 정한 지원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등 부정수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신고 및 대출금을 반납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사업목적 외에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들은 조합의 직원을 기망해 국고용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에 조합에 경제적 피해를 입혔다”면서 “조합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점,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담보 부동산의 민사상조치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배경을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1. 화순, 전원주택 부지, 매매
2. 약 4800평
3. 매매 - 16억 8천만원
4. 문의 . 010 - 3605 - 5000